법치 흔드는 '디지털 자경단'…사적 단죄의 그늘 짙어진다

법보다 빠른 SNS 폭로, 경산 살인 피의자 신상 털려
감정-처벌 엄격하게 분리하는 법치 원칙 '파괴' 확산
잘못된 정보 확산·마녀사냥식 군중재판 위험 커져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자경단'에 의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의 공식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누리꾼들이 직접 피의자의 신상을 찾아내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적 절차를 건너뛴 사적 단죄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산 살인범 신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쏟아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의자의 정면 사진과 실명은 물론, 과거 일상 사진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SNS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현행 법률(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은 범행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절차보다 SNS의 확산 속도가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디지털 자경단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중의 분노가 몰리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 공간은 사적 단죄의 장으로 변모해 왔다.

2023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며 사회적 논란 촉발했고, 같은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서도 공식 공개 전 피의자의 사적 정보와 사진이 온라인에 선공개되어 확산했다.

202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무고한 지인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사태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발간한 '사적 신상공개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온라인 신상공개가 개인의 인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법조계와 경찰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공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친 사적 제재가 불러올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먼저 확산되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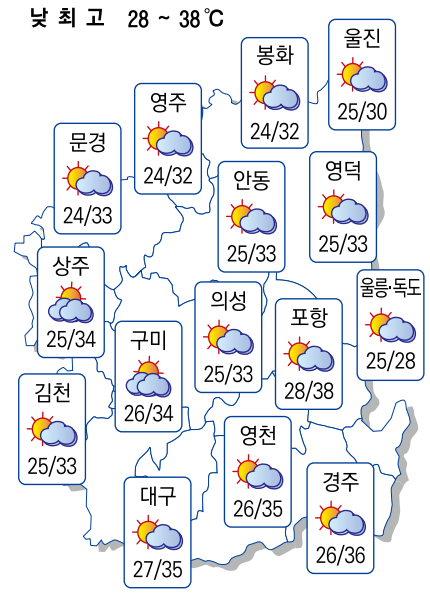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역시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사적 제재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치주의는 감정과 처벌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섞여 무고한 가족이나 지인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처벌은 엄연히 국가의 몫"이라며 "법원이 아닌 여론이 먼저 사람을 단죄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국 그 누구도 마녀사냥식 군중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오늘의 날씨(7월13일)

지역별 날씨(최저/최고)
아침최저 24 ~ 28℃
낮 최 고 28 ~ 38℃



주간예보

14일	15일	16일	17일
26~32℃	26~34℃	23~34℃	23~33℃

생활지수

운동 30	실내에서 가볍게 요가를
빨래 70	야외 건조 좋아요
세차 30	차 내부 정돈이 좋아요
우산 20	필요 없어요
냉방 100	냉방 없이 견디기 힘들어요
수면 10	열대야 조심하세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좋음	보통	한때나쁨	나쁨	매우나쁨

지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구	●	●
경북	●	●



역시, 피서는 바다지!

경북 동해안 일대의 24개 지정 해수욕장이 지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한 가운데, 12일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휴일 나들이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조희팔 320억 배당이의 속출…'275억' 달해

공탁금의 85% 소송으로 묶여
법정 공방 장기화로 혼란 가중

건국 이래 최대의 다단계 사기극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 320억 원에 대한 법원의 배당 절차(본보 6월 22·24·25일 보도)가 시작됐으나, 피해 채권자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으로 결국 실제 배당에 이르기까지 법적 공방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안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총 65명에 달했다.

이후 일주일의 법정 기한 내에 실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9건으로,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58명, 피고는 55명이다. 이들이 소송을 통해 묶어둔 금액만 275억 4천여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탁금 320억 원의 85%를 웃도는 수치다.

이 공탁금은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 붙잡힌 고철업자 현모(64)씨가 법원에 낸 돈이다. 해당 사건의 전체 피해자 수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배당 당일에도 공정한 분배 기준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쳤다.

수백억 원의 공탁금을 둘러싼 채권자 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320억 원 외에도 조희팔 사건과 관련된 2건(총 70억 원 규모)의 배당 절차가 아직 더 남아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다.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은 일부 공탁금은 중복 금액 등을 제외한 뒤 출급 가능액이 정해지는 대로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2개의 배당 사건은 기존에 배당된 금액을 어떻게 공제하고 처리할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핵심 범죄수익금이 소송에 묶이고 추가 배당 절차마저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십수 년째 이어져 온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경 '피의자 자백조서' 빼먹고 구속영장 신청

구속 방어에 유리한 조서 누락
검찰, 신청 기각·시정조치 요구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한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출금책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전말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A씨와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이상함을 감지했고,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조서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을 파악했다.

누락된 조서에는 A씨가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진 출석했다는 내용의 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춰주는 매우 유리한 자료로 작용한다. 이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가 빠진 채 청구된 구속영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격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해당 경찰서에 수사 절차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공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자칫 적법절차를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검찰 단계에서 걸러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누락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서류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아영 기자

동구청, 집중호우 대비 만전
침수 취약지 현장점검 나서

대구 동구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동구청은 지난 9일 우성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동촌유원지와 금강동 행복마을,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가 큰 재난취약시설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침수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이동식 물막이판과 워터댐 등 수방자재를 침수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집중호우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